社 說

최후까지 일전의 노력을 경주하라

—92학년도 1학기를 마감하며

어느덧 한학기를 마무리 해야할 시점에 와있다.

'92학년도 1학기는 다가오는 기말고사로 끝나게 되고 이제는 하계방학과 함께 2학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나편서 생각해보면 이번 1학기는 학내적으로 많은 시련이 있은 한학기로 경희 역사에 남을 것이다. 학기 초 등록금 투쟁으로 학교는 거의 두달간 휴강 및 수업이 거의 마비되다시피하며 흘렀던 것이다.

예년과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남겼으며 학내적으로는 너무나 큰 시련을 겪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승리가 아닌 학교와 학생 서로의 패배로 귀결될 수 밖에 없었던 싸움이었다. 결과적으로 보아서도 그렇다. 학교는 학교 나름의 관단이며 등록금 인상률의 일방적인 집행으로 학생들의 반발을 더욱더 증폭시켰으며 이후 사태추이를 충분히 감지하지 못해 사태의 해결점을 효율성있게 판단을 신속·정확히 내리지 못했으며 학생들은 대표자적인 총학의 지도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움직였다는 것이 문제였다.

즉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을 좀더 신속성있게 받아들여야 했으며 학생측의 대표자·지도자격인 총학은 너무나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학생들을 선도, 이렇게 보면 피해는 학생들만 보게된 형태로 끝나 버렸던 것이다.

등록금 투쟁이후 '승리'라는 문구를 통해 승부의 결론에만 치중하고 야외임수격으로 이해·신전성을하는 총학의 자세는 결코 학생을 존중하는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학교측도 입기풍법적으로 문제의 고개만 넘고 보자는 식의 대응방식 혜심을 호도하는 방관주의는 이제 피해야 함이 자명한 일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1학기 양태과스에 걸쳐 가장 큰 사건이 등록금 투쟁이었다. 이제는 어느정도 해결 정상국면에 서서 수업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당면문제는 '가람의서 속'에 명시된 문안의 현실적 노력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생간의 서로와 끊임없는 노력만이 앞으로 경희가 살길이다. 우리모두 하나되어 경희를 사랑하고 키우려는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나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

바으로는 전대협 출범식이 치루어졌고 그것은 다시 유월 항쟁을 생각케 한다. 87년 6월항쟁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오늘의 한국정치사회 상황에서 학교에서 안주하는 경희인이 아닌 사회변화적인 자식인으로서 경희인은 운동하여야 한다.

쉽을 단순히 아는 지체도서만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 실천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야 말로 참 다운 경희인이다. 경희인은 지난 시월 3·15치성선거와 한일회담등의 여러 시련기에 있어 물론 사회변혁의 기수로서 자리잡아 왔던만큼 오늘의 경희인도 그러한 경희인의 맥을 이어야 하는 것이다.

교내외적으로 우리는 92년 한학기를 이제 마감해야 한다. 지난 학기는 짧은 시간속에서도 우리는 너무 큰 시련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고난을 역경을 거쳐나가야 할 것이다. 국민선거는 물론이며 혼란한 경제 질서를 바로 잡는데에도 대학인으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 경희인은 오늘의 대학인으로서, 항시 어느때도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의 소원'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데 재제가 아닌 주체로써, 아픈시대지만 역사의 주체로서 살아 움직이는 경희정신이 필요한 때이다.

6월이다. 6월을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는 경희 본연의 정신을 되새기며 유종의 미, 한학기라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우리 다시금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보며 좀더 나은 2학기를 준비하며야 함께가 아닌가. 보다 알찬 학기 마무리를 위해 학업에 최후의 노력 또한 경주해야 겠다. 경희인 모두에게 보람찬 1학기가 되었으면 한다.

문화의 얼굴은 바뀌어야 한다

—대학문화의 새출발과 대동제

60년대 대학의 축제는 다양한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페스티발, 팡팡파티등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전 축제기간의 행사는 대동의 정신을 가지며 그 끝을 맺었다.

60년대초 대학의 축제는 각종 행사와 오락, 집단적 표현, 가두시위 등이 산발적으로 어우러지게 되었고 개교기념일, 중간고사 이후의 학기중, 4·19기념일 혹은 5·16을 전후한 시기를 축제 기간으로 택하여 매년 지속시키게 되었다.

60년대 대학축제 그것은 보수적이었으며, 또한 반대로 진보적이었다.

유명한 인사의 초청강연, 학술토론, 미술전과 음악회, 시낭송회, 체육대회가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축제는 이후 서양 문물을 아무런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또다른 점이 되어버리기도 하였다. 어쩌면간에 이들은 축제 마지막날에는 모두 모여 하나가 되는 행사를 치루었다. 그 행사는 당시 캠프파이어로 대변되기도 하였다.

당시 대학은 시대를 반영하였다. 군부독재 경향이 분명해지자 군사문화에 대한 하나의 반대세력으로 학생운동세력의 진로를 암시하며 나아갔다.

학생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교수들도 군부의 비판 세력으로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곧바로 학생운동이나 축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학생들은 4·19의 민주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자는 방향으로 사시건건 군부에 대항하면서 대규모의 집단적인 축제를 통해 참여정신을 높여갔다.

이후 대학의 축제는 전통적이고 민중적인 요소를 과감히 수용하는 방법론으로 진행되었다. 서구 모방적이고 호사취미적인 일부 지도층 중심의 실내공간 축제에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풍물놀이나 길놀이, 민요, 탈춤, 민속놀이로 그 길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후 대학생들의 놀이문화는 소비 향락적인 요소를 지혜롭게 헤쳐나가지 못했다. 더불어 축제의 모습 또한 무절제한 모습을 띄며 기성세대의 유흥과 향락에 덧씌우기 식의 안일한 모습이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모습은 축제의 본질을 호랑다. 무엇인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새로운 것을 갈구하며, 군중이 모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려는 정열과, 공동의 참여로 흥분과 쾌감을 맛보는 축제는 이미 옛 이야기가 되었다. 그러나 그 근원에 깔려 있는 공동의 창조와 존중의 표현은 살아나야 하지 않겠는가.

아무튼 사회의 일면을 대학은 느껴야 할 것이며 그 현상을 외면하지 말고 대학의 일부로 받아들여 새 출발을 맞이야 한다.

과거의 대학과 대학축제가 모든 사회현상을 받아들였듯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우리의 얼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얼굴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미래에 비춰지지 않도록 하는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면체비평

대권정국 둘러싼 무소속 여파와 민의

지난주는 전대협출범식등 집회와 행사가 주말에 집중적으로 치루졌다. 그러나 12월에 있을 대권정국 역시 정치면에서 커다란 물줄기를 이루며 한주를 휩쓸었다.

특히, 무소속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향로에 대한 관심은 유별났다. 물론 그 자체 한편, 한편이 모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영입에 따른 기타 여파와 신경전의 의미 역시 크다 하겠다.

조선일보는 지난달 24일자에서 "무소속 당선자 '새옷입기' 분주"라는 제목하에 무소속 영입 노력과 총 21명중 15명의 거취를 추적 보도하였다. 이 보도에서 23일현재 14대 무소속 국회의원당선자 21명 가운데 4명이 민자당, 2명이 국민당에 입당원서하였다고 밝혔다.

바로 대권경쟁의 제 1라운드가 시작된 것이다. 이 대표경쟁의 치열한 양상은 이후 대권운동중지로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민의를 무시한 그들의 행동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런데, 25일 이후에 와서는 상황이 약간 바뀌어서 26일자 한국일보 정치면에서는 "국민 집안단속 비상"이라는 제목하에 민자당 영입과 그에 대한 국민당의 대응을 다루고 있다.

바로, 무소속 영입에서 여타 당의 당선자에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것은 물론 14대 첫국회 개원이 되기전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 면체 문제와 관련 역시 영입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다. 25일 조선일보의 '고바우 영감'과 28일자 조선만평, 29일자 한겨레신문 '한겨레 그림판'이 대표적으로 영입에 관한 부분을 다루었다. 여기에서 보면 조선일보에서는 발목 잡는 정대표와 무소속 영입에서의 민자, 국민의 저자세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한겨레 그림판'에서는 민의(民意)를 무시한 파렴치한 무소속 의원과 민자당을 밀실 정치로 대표되게 풍자하였다.

28일에 오면서 야당의원 탈당에 따른 민자당의 정치형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었다. 28일자 조선일보 3면에서는 "야의원 탈당 민자쏭 공방"이라는 제목으로 야당의원 탈당과 이를 둘러싼 민주당의 '정치공작'목소리, 국민당의 긴급수뇌회의, 민자의 '무관'주장을 다루었다.

같은날 한국일보 정치·해설면인 3면에서는 민자당 김대표가 대선정국의 조기과열조짐 진정을 위한 회담을 만주, 국민당에 제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난 한주의 정치적 흐름은 다만 정치꾼들의 제스처와 아무 의미없는 공방만을 되풀이 했다.

민의(民意)를 저버린 일부 무소속의원들의 태도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지만 제도권 언론의 관심의 표적(?)이 되지는 못했다. 12월에 실시될 대선에 벌써부터 과열양상을 띠며 달려드는 후보들 하며 전반적으로 방향성 없는, 그저 시류에 영합하는 정치극 이외에는 아무것도 지면에서 찾을 수 없는 그런 한주였다.

(이지환 記者)

생존권 보장없는 임금 논리

—무노동 무임금원칙 적용의 문제점

사론

87년 11월 28일과 89년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생존권 보장 투쟁을 위한 합법적인 여지를 다소나마 확대시켜 주었다.

그동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이 노동자들의 파업기간을 통하여 사용자측이 그렇게도 강조했던 '원법파업, 불법투쟁'이라는 것이 노동관련제도나 노동정책등 강력한 노동통제하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이 합법적으로 파업을 통해서 요구를 관철하려하자 사용자들과 정부는 이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들고나와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일부 기업에서 파업후나 임금교섭을 마무리하면서 노사간에 '여름들어 파업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상여금 50%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을 들어 일부 언론은 우리나라에서도 파업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의 문제가 하나의 원칙으로서 정착,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무노동 무임금은 몇가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이란 말 그대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임금도 없다는 뜻으로 선진국의 노사관계에서는 일반적 관행으로 되어 오던 것이다.

이같은 '무노동 무임금'이란 관행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 즉, 파업과 관련시켜 볼 때 쟁의행위에 참가한 기간동안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쟁의기간중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측은 '무노동 무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임금교섭을 촉진시키게 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파업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사용자와 정부를 비롯한 사회일각에서 일고 있는 '무노동 무임금'논리의 관철 주장은 사용자 입장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논리인 것이다.

실제에 있어서 '임금 기금제', '파업기금'등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현상황에서는 쟁의행위의 조속한 해결을 저해하고 노동조합의 역할을 위축시키는 또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의 적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에대해 몇가지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겠다.

우선 노동자들의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된다고 보는 관점이 일반적이라고 할 때 노동자는 노동력의 재생산비보장 즉, 생활권 보장요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의 생활권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유로운 이윤추구 활동도 보장되어야 하기때문에 국가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헌법상의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임금문제를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되 평화적인 교섭으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는 단체행동권의 보장을 통하여 확보되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볼때 파업기간중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노사문제는 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노동력 제공을 거부한 경우 노동력제공을 거부하기까지 이른 원인이나 배경 및 그 과정에 대해서는 모두 불문에 부치고 노동력제공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귀책을 모두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불합리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개인적인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의 경우와는 달리 단체행동 특히 파업에 이르기까지의 경우는 그에 대한 상당부분의 책임이 사용자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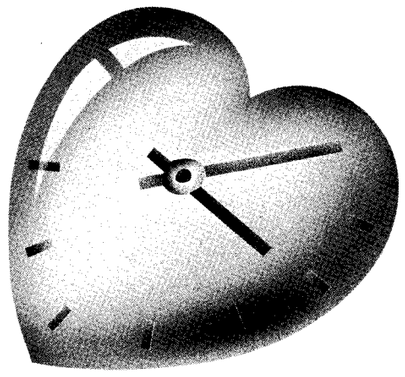
만약, 파업기간중의 임금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논리가 관철되어야 한다하더라도 그것의 실시를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그것은 첫째, 노동기본법이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겠고 둘째, 단체교섭이 산업별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겠이며 세째,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파업기금, 임금기금제등의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파업기간중의 '무노동 무임금'논리의 관철 주장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억누르기' 위한 또다른 굴레로 작용할 것이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하여 결근과 같은 개별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노동에 대한 무임금의 논리마저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업기간중의 임금문제는 그것이 노사관계에서 발생된 것인만큼 최소한 우리나라 노동운동사와 노동현실의 열악함을 비추어볼때 시기상조라고 전제할 것이며, 그것의 해결은 당연히 노사 당사자간의 교섭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만이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통해 진정한 산업평화를 정착시키고 성숙된 노사자치주의 관행을 만들어 나가는 길이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송보영 記者〉

POSCO 메세지④ 1학기 종강편



종강, 그것은 또다른 개강

학기가 지식을 쌓는 기간이라면
방학은 지성을 닦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학문에 쏟았던 시간과 정열을
인생의 폭을 넓히는 데 모두 쓰십시오.
여행도, 운동도, 독서도 좋고
연극, 영화, 심지어는 연애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마음의 시간을
보냈나하는 것입니다.
방학은 학생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다시오지 않습니다.

새학기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만날수 있도록 친구끼리 약속합시다.

포항제철은 다음 세대의 행복과 다음 세기의
번영을 약속하는 국민의 기업입니다.

포항종합제철주식회사
Pohang Iron & Steel Co., Ltd.